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서



- 제1회 대토론회 | 연금개혁
- 제2회 대토론회 | 기후위기
- 제3회 대토론회 | 인구위기
- 제4회 대토론회 | 교육개혁
- 제5회 대토론회 | 세계질서
- 제6회 대토론회 | 벤처·스타트업
- 제7회 대토론회 | 지방소멸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서

CONTENT

Ⅰ 개요 및 현황 4

Ⅱ 개최 성과 7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8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18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28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교육개혁	35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43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50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	60

[부록] 전문기자 간담회 68

개요 및 현황



I

I 개요 및 현황

대토론회 개최 취지

-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과 정부부처 및 각계의 전문가가 논의하는 장을 마련
- 주요 국가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연속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제고

대토론회 개최 방향

- 국회 특위*에서 다루는 주제 및 주요 국가현안인 교육개혁, 세계질서, 지방소멸위기 등을 포함하여 7대 주제를 대토론회 논의주제로 선정
- * ①연금개혁특위, ②기후위기특위, ③인구위기특위, ④첨단산업특위
- 토론회 내용은 국회 특위의 논의 사안과 국회연구조정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인 국회 소속기관간 공동연구 등을 최대한 연계하여 확정

대토론회 운영 및 기획

- 대토론회 행사 운영기관
 - (주최)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 대토론회 행사 기획
 - 토론 주제별로 국회미래연구원 담당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회소속기관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 기획
 - 토론 주제와 관련있는 상임위(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정부부처 기관장,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및 언론인 등을 섭외하여 내실있는 토론 기획
- ※ 국회소속기관의 공동연구 결과 공유 및 토론 참여 병행

대토론회 홍보 및 성과확산

- 대토론회 전단계로 각 주제와 관련된 전문기자단, 논설위원 등을 초청하여 국회사무총장 주제 기자간담회를 실시, 현장의 경험을 통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동시에 관심 환기 및 홍보를 유도하고자 함(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국회미래연구원)
- 행사 개최 전 사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고, 해당 주제 관련 전문기자 대상으로 기자간담회 개최 및 행사 후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사후 보도자료 추가 배포(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 행사 내용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중계하고, 대토론회 주요 내용을 편집 및 재구성하여 유튜브 콘텐츠로 성과확산 추진(국회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

대토론회 개최 현황

차수	일시	대주제	토론주제
1	3.21.(화)	연금개혁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전망과 대안
2	4.11.(화)	기후위기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3	4.25.(화)	인구위기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4	5. 9.(화)	교육개혁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5	7.13.(목)	세계질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7.19.(수)	벤처·스타트업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7	8.30.(수)	지방소멸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대토론회 성과와 의미

-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2023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여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진행됨. 본 대토론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관련 업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호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본 대토론회에서는 7회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부터 인구, 지방소멸문제, 벤처·스타트업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 현안들을 다루었음. 논의된 주제들은 국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 현안이면서, 장기적·거시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대상들로, 국회 연구조정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향후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통한 제언들을 공동연구에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연구 결과가 다시 국회의 입법과정, 예산 및 정부정책 감독 과정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로 도출될 것을 기대함

개최 성과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교육개혁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

II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II-1 제 1 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 1 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2023. 3. 21. 화 | 0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

1	<p>개회식 9:30~10:00</p> <p>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축사</p>	<p style="text-align: right;">사회이예재 국회방송 아나운서</p> <p>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p>
2	<p>발제 및 토론 발제 10:00~10:40</p> <p>발제 1 [공적연금 개혁과 재정전망]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p> <p>발제 2 [재정안정을 고려한 연금개혁 방안] 김용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p> <p>발제 3 [재정진단의 올바른 이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김연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p> <p>토론 10:40~11:30</p>	<p style="text-align: right;">좌장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p> <p>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p>

주최



대한민국 국회
KOREAN PARLIAMENT

주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회미래연구원
KOREAN NATIONAL ASSEMBLY FUTURE RESEARCH CENTER

개요

- 주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전망과 대안
- 추진 배경
 - 연금에 대한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금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
 -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들은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재정전망과 쟁점분석 등의 공동연구 추진
- 일시: 2023. 3. 21(화) 09:30~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금개혁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개혁 사안”인 동시에 “국회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 현안이라고 강조
- 또한 “2015년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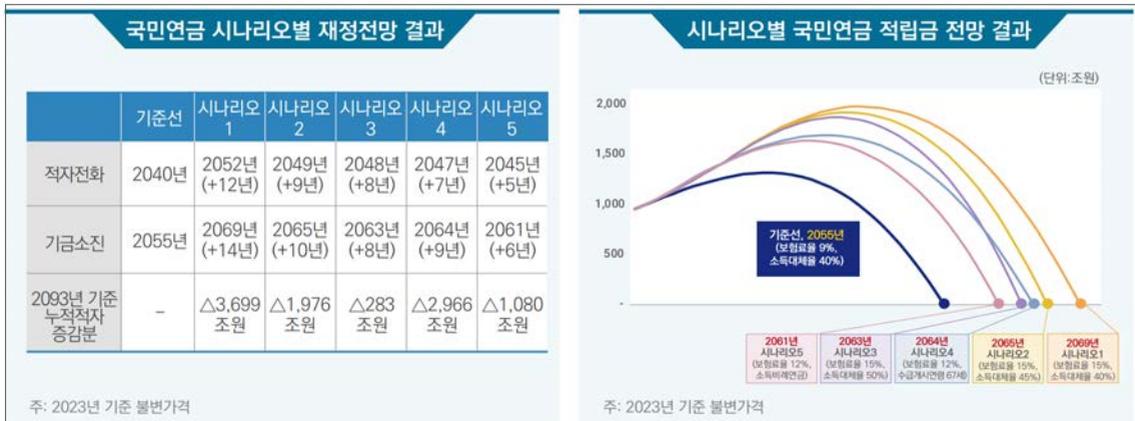
주요 논의사항

발제 · 01

“시나리오별 공적연금 재정전망 분석 결과” 발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 공적연금 이슈를 세 개의 관점(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에서 분석하여 결과 제시
 -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분석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5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됨
 - 중고령자(50대 이상)가 생각하는 노후최소생활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액은 낮은 수준임
 - 공적연금 제도 간 평균 급여액을 살펴보면, '22년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급여액이 직역연금 수급자보다 낮음
- 시나리오에 따라 전망한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가 최대 14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5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을 현행 기준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이 2069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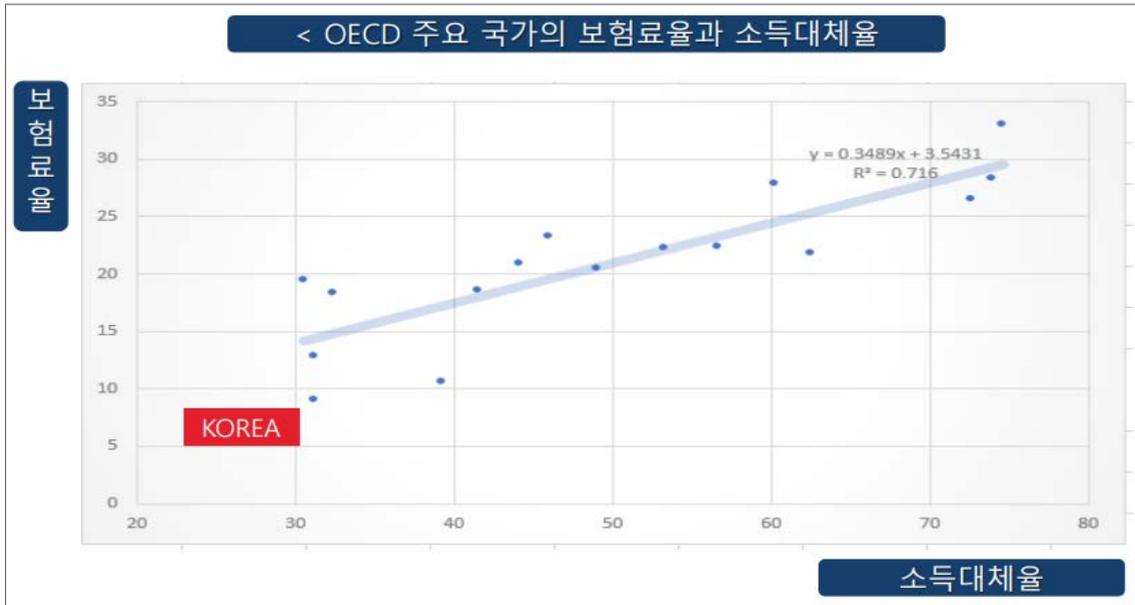
|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발제자료 |

발제 · 02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매칭” 제안

김용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소득대체율과 균형보험료율의 비율을 각각 40%-17%, 45%-19%, 50%-21%로 맞추는 방안 제시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관련 쟁점 가운데 가장 이슈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반드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
 - 1997년 캐나다 연금개혁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인상함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조정하여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
 - 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방안 제시



! 김용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제자료 !

- 또한 지급개시연령도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단계적 조정이 불가피
 - 기대수명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70.7세에서 2021년 83.5세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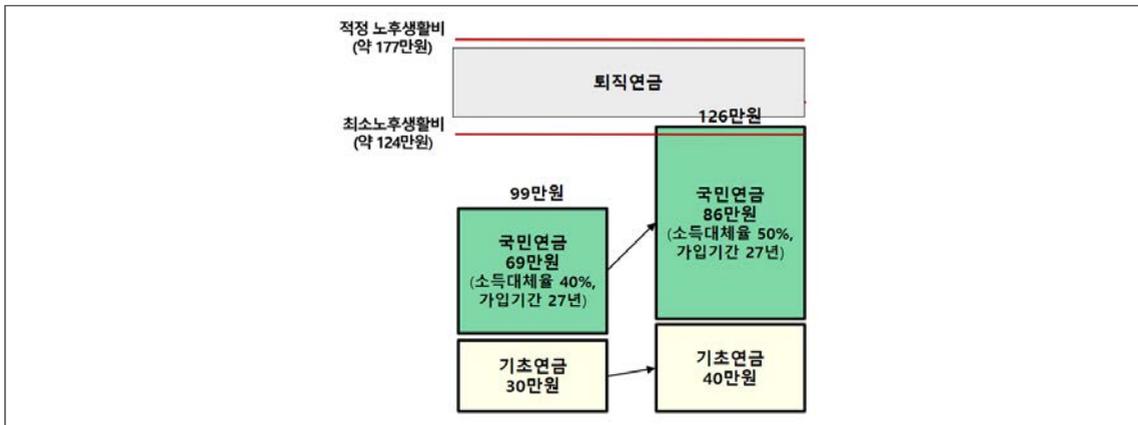
발제 · 03

“국민·기초연금 동시 인상을 통한 최소 생활비 보장” 제안

김연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조정하여 총 급여액을 최소 노후생활비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제시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인 27년동안 가입한 중간소득자의 연금급여액 86만원에 기초연금 40만원을 합산하여 총 126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 총 급여액 126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177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최소 노후생활비(124만원)는 보장 가능

* 적정·최소 노후생활비는 '21년 국민연금연구원 제9차 노후생활실태조사 결과 기준



김연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제자료

- 한편,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기금 적립금의 급격한 팽창, 수익비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
 - 노인빈곤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GDP의 100%가 넘는 대규모 적립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일본, 스웨덴의 경우 GDP의 30~40%)
 - 소득대체율을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13%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수익비가 1 미만으로 감소하여 연금총액이 보험료총액보다 낮아지게 됨



토론 1. “보험료율 조기 인상을 통한 기금 투자 확대” 제안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하되, 이를 통해 마련된 기금 적립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제시
 -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금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보다 빠르게 인상할 필요
 - 보험료율 인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15% 안은 급여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 6%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9% 여유분을 기금에 투입 가능
- 국민연금 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운용할 경우 수익률 제고 가능
 - 현재 재정전망에 적용되는 기금의 실질 투자 수익률은 2.5%로 매우 낮은 상황
 - 연기금은 중도 인출이 없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며, 위험 관리가 잘 되는 양질의 자금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기금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캐나다 사례 참고)



토론 2.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제안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급여 인상만으로는 한계 존재
 -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8.3%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할 경우 총 20.3%로 가입자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최대 12%가 보험료율 한계
 - 또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하더라도 약 20년 이후 상위 소득자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므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 불가능(현재 노인 빈곤층이 주로 75세 이상 노인)
-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OECD와 비교하면 연금재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는 공적연금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므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토론 3. “출산률 제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연금 체계 효율화” 필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기초연금 재원이 세금으로 총당되고 있어 기초연금 인상 시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고 향후 조세 저항이 증가할 것이므로, 기초연금 확대 반대
- 현행 제도 중 국민연금이 가장 효율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므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을 국민연금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 재정계산 방식이 장기미래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므로, 재정계산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음
 - 따라서 근본적으로 출산률을 제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GDP가 늘어날 경우, GDP 대비 연금 부담률은 6~7%까지 하락할 수 있음

토론 4.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결정권자들의 개혁 의지 필요” 강조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

-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부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정책을 결정해야 할 주체들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
-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혁을 위한 구체적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국회연금개혁특위도 명확한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토론 5. “주기적 점검의 제도화” 필요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주기적으로(예컨대 5년마다) 연금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현행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80이므로, 보험료로 내는 것보다 연금 급여로 더 많이 받는 구조이고, 인구 구조 상 제도 지속이 불가능
 - 연금개혁은 국정과제로서 3대 원칙(노후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성 강화, 세대간 공정성 강화) 하에서 균형 있게 추진

대토론회 이후 주요 논의경과

국회의 논의 경과

- 2022년 10월,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하면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 중에 있음
: 특위는 활동기한이 한 차례 연장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
- 다만, 연금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해,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정부의 추진 경과

- 정부는 3대 개혁과제로 교육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연금개혁 추진
-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하여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 발표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2%, 15%, 18%, 수급개시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각각 세 개의 목표치가, 기금운용수익률은 0.5%p, 1%p 상향치가 제시됨
-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쟁점과 향후 과제

-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최대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방안에서도 소득대체율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면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 국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매칭안”, “50% 인상안” 등과 기타 여러 방안들을 참고하여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
- 또한, 금번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구조개혁 방안 마련 필요

02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II-2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기후위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2023. 4. 11. 화 | 0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개회식	9:30~10:00	사회이예재 국회방송 아나운서
1	<p>개회 및 국민의례</p> <p>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p> <p>축사 서삼석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p> <p> 유제철 환경부 차관</p>		
	발제 및 토론	10:00~10:30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2	<p>발제 1 [기후위기 극복,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의 준비]</p> <p> 유희동 기상청장</p> <p>발제 2 [기후재난 시대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p> <p> 조천호 前국립기상과학원장</p>		
	토론	10:30~11:30	
	<p>토론 조명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p> <p> 이소영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p> 신현석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위원장 / 부산연구원장</p> <p>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p> <p> 장희창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장</p> <p>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p> <p> 박상욱 JTBC 기자</p>		<p>주최 대한민국 국회 NATIONAL ASSEMBLY</p> <p>주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p> <p>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p>

개요

- 주제: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과제는?
- 추진 배경
 - 기후변화 가속화로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분야별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특히 한반도 주변 연평균기온,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보다 빨라 정확한 관측과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일시: 2023. 4. 11(화) 09:30~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미 인류는 기후재난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기후위기 대응은 존각을 다투는 핵심 국가과제”이며,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 현안임을 강조
- 또한 “2020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까지 이어진 선례”를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당부



주요 논의사항

발제 · 01

“기후위기 극복,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의 준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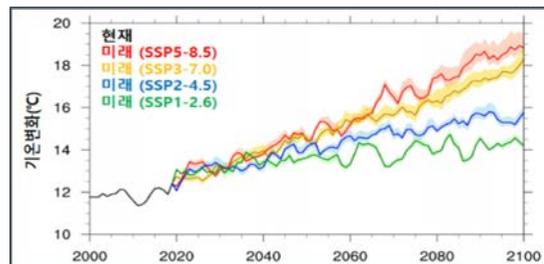
유희동 (기상청장)

- 과거 100년의 기후 데이터를 통해 본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황을 진단
 - 2020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14.88℃로 20세기보다 0.98℃ 상승하였으며, 최근 30년간 전 지구 평균 기온은 0.12℃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0.21℃ 상승하여 국내 기온 상승 속도가 빠름
 -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 지구 평균인 415.7ppm보다 높고, 연평균 기온상승률은 0.2℃/10년으로 전 지구 상승률 0.07℃/10년보다 3배 가량 높음
 - 최근 30년 대비 최근 10년간 폭염일은 2.8일 증가, 열대야 일수는 4.6일 증가하고,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한달 이상 폭염으로 인한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 증가
- 미래 100년의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기후재난 시대에 기후위기 극복과 국가 도약을 위해 기상기후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
 - 탄소배출 정도에 따라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2.3℃~6.3℃까지 상승 전망, 여름 일수는 170일까지 길어지고 폭염 일수 9배, 열대야는 21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지금부터 탄소배출의 적극적 감축 필요
 -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방향 제시와 에너지, 식량, 보건, 재난, 교통 등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과거 100년의 기온변화〉



〈SSP 시나리오별 향후 100년의 기온변화〉



| 유희동 기상청장 발제자료 |

발제 · 02

“기후재난 시대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제안

조천호 (前국립기상과학원장)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 전역에 인간과 경제, 생태계 등 여러 분야에 핵심적 위험이 누적되고 있음
 - IPCC AR6 종합보고서를 인용하여,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더 낮은 기온 상승에서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
 - 기후변화는 극한 날씨로 인한 재난뿐 아니라 생태계와 불평등, 인간의 건강과 식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종합적 대응 필요
-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기후회복력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10년간의 정책적 선택이 인류 미래의 가능성을 결정함을 강조
 -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50% 이상 배출 저감 가능하므로, 부문별 탄소저감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 감축 노력 필요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저감과 적응정책, 지속가능한 개발 병행을 통한 기후회복력개발이 필요하며, 연대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 필요
 - 우리의 정책적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



| 조천호 前국립기상과학원장 발제자료 |



토론 1. “위성을 활용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제안

조명희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처별 위성센터와 지표열 위성 개발 등을 통해 기후 측정과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 기후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지표열 측정이 가능한 열적외선 위성 개발로 지표면에서의 기온변화를 측정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 정책을 마련
 - 부처별 위성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기후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토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와 언론인,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하고 지켜볼 것”을 당부

이소영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IPCC는 2030년까지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함을 지적
 - 2030년 감축목표 달성과 이행을 위해 확실성이 높은 감축 수단을 우선시 해야 하나 해외감축과 CCUS와 같은 수단에 의존도가 높음
 - 초안 발표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 문제제기가 반영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실질적 기후대응을 위해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롤링 플랜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인, 시민의 관심과 정부에의 요구가 필요함을 당부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수립, 국회에서의 토론 등 모든 활동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함임을 강조
 - 기본계획이 롤링 플랜으로서 향후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당부



토론 3. “도시 대전환과 녹색 기후테크 육성 등 실용적 실천 방안 마련” 제안

신현석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위원장/부산연구원장)

- 기후변화는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로, 도시·환경·성장을 고려한 통합적 대전환 정책 필요
 - 현재의 도시가 자연재해에 지속가능한지 점검하고, 도시 차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확산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도시가 녹색 및 디지털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녹색 기후테크와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
 - 기후 적응을 위한 도시전환 관련 녹색 기후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는 등 선도적 녹색산업 정책 마련 필요



토론 4. “청정에너지원 확대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위한 국민 수용성 확보” 당부

양익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로의 구조변화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
 - 에너지는 현대 문명을 이끌어 온 주체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청정화가 필수적인 상황
- 그러나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확보 필요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백업전원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배출량을 제거하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부담 비용 증가 예상
 - 이러한 비용은 에너지 가격 인상, 배출권 등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며, 국민 스스로가 청정환경을 생각하여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



토론 5. “새로운 질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저감 정책 마련” 촉구

장희창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장)

- 기후변화로 다양한 감염병 유발과 감염병 발생 지역이 변동되고 있으며, 새로운 팬데믹 주기가 빨라지며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응 필요
 - 말라리아, 진드기, 쯤쯤기무시 등 매개성 감염병들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기가 변하고 있으며, 덩기열 모기 등 아열대성 매개체가 많아지고 있음
 - 조류독감, 코로나, 사스, 메르스 등 야생동물 바이러스의 인간 감염 사례가 많아지고 새로운 팬데믹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대응 정책 필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별적 R&D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므로 실효성 있는 탄소저감 대책 마련 필요



토론 6.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해 장기 기후예측 정보 제공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필요” 강조

홍성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 기온 상승과 물 부족 등은 작물기간과 생산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에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필요
 - 최근 남부지방의 봄 가뭄이 증가하고 있어, 발가뭄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의 단기 기상예측뿐 아니라 최소 1개월 이상의 장기예측 전망 필요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과 생산량 예측 기반 구축 필요
 - 기상이변이 다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영농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작물 재배관리 및 출하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농촌 초고령화 대응과 이상기상 대비 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 인력·노동 중심의 관행 농업에서 데이터·시스템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 필요
- 안정적 식량 수급을 위해 기상이변 발생 시 작물 재배면적, 생산량 변동을 사전 예측하고 작물별 생산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



토론 7.

“정부와 언론, 산업계, 시민사회 모두 각자 위치에서의 책임의식 필요” 강조

박상욱 (JTBC 기자)

- 지금까지 30년 동안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먼저 인지한 언론과 정부, 산업계의 책임의식 부족 문제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왔음을 지적
 - 1990년대 언론과 기상청, 정부 등은 국제 탄소배출 규제와 기온 상승, 탄소세 도입에 대해 경고하고 범 정부 대책기구 구성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 위험성과 영향 정도를 인지하고도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한국은 실질적 대응을 하지 않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옴
- 기후위기 대응은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로, 탄소중립과 국가 생존은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강조
 - 기후위기는 쌀 생산 등 식량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2.2%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에도 큰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
 - 그러나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미흡한 수준, 인간이 적응에 능하다는 사실로 감축의 시급성을 가려서는 안되며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함

대토론회 이후 주요 논의경과

후속 추진사항

-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측·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2023년 9월 1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
-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을 위해 국회미래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이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대 중이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단계별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이에,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조사 및 국내 정책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 대응과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03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II-3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구위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2023. 4. 25. 화 | 09:30 - 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1	개회식	9:30-10:00	사회이재재 국회방송 아나운서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	발제 및 토론	발제 10:00-10:40	
	발제 1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발제 2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토론 10:40-11:30	좌장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토론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이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 기자	

주최 대한민국 국회
NATIONAL ASSEMBLY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 INSTITUTE

개요

- 주제: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추진 배경
 - 저출산이 국가 아젠더로 제시된 이래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약 280조를 써 왔으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2006년)에서 0.81명(2021년)으로, 출생아 수는 451,759명(2006년)에서 260,562명(2021년)으로 감소
 - 제21대 국회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 일시: 2023. 4. 25(화) 09:30~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구위기가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부터 허문다는 점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하는 이번 토론회 자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



주요 논의사항

발제 · 01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발표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 ‘선택과 집중’의 취지에서 가족 지원 정책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
 -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로, 정책 대상을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에 집중할 필요
 - 8~17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과 분리된 별도의 재원을 가진 부모보험을 도입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제안
- 고용, 주거, 사교육 정책 등 구조적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고용안정성 결여를 임금 등 처우의 향상으로 보완하는 정책, 체감주거비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하여 주택가격을 조절하는 방안,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발달권 보장의 측면에서 사교육의 시간·비용 한도를 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

첫째, 기본정책의 내실화	둘째, 사회구조적 대응 모색
① 아동수당 0~17세 아동 전체로 지급대상 확대 및 증액 ② 부모휴가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재원을 가진 보편적 생애초기 부모돌봄(출산·육아 급여) 지원 ③ 일·생활 균형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 법정 근로시간 준수, 하루하루의 일·가정 양립 보장이 핵심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을 지속해도 양육자들이 서비스 시간 부족을 겪게 하는 요인)	① 고용 고용형태에 따른 안정성·임금 빈익 빈부익부 개선, 고용안정성 결여를 임금 등 처우 향상으로 보완 ② 주거 주택은 생활필수재, 체감주거비를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하고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조절 ③ 사교육 가족지원(+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무색하게 하는 막대한 양육비 부담 초래, 아동의 행복추구권과 발달권 보장의 관점에서 사교육 시간·비용 한도 규제 마련, 경쟁교육 개혁

|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발제자료 |

발제 · 02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 발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저출산 예산 중 상당 비중이 직접 관련성이 낮은 정책에 쓰였다고 분석
 - 2006년 2.1조원을 시작으로 2012년 11.1조원, 2016년 21.4조원, 2021년 46.7조원, 최근인 2022년 51.7조원 등으로 예산이 점차 증가
 - 제1차~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 및 양육지원 비중이 컸으나, 제3차 기본계획부터는 청년 일자리, 주거지원 등 환경 조성 관련 예산이 증가
 - 일부 저출산 대응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을 해외 주요 국가들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정책 영역별로는 2022년 기준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보육 및 돌봄 23%, 현금성 수당 11% 등의 순
 - OECD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대표적인 가족지원 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낮음

저출산 대응 예산 분야별 분석

- 저출산 기본계획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예산 추이
 - 1차(2006~2010년) 저소득가구 보육지원, 2차(2011~2015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 초점 (출산 및 양육지원 중심)
 - 3차(2016~2018년)에서는 만혼, 비혼 대책으로 전환,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에 따라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
 - 3차 수정계획(2019~2020년)에서는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예산 크게 증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4.5조원(18) → 21.5조원(20)), 4차(2021~)에도 이어짐

구분	대상	주요 지원 내용
출산·양육 지원	아동 양육가구	출산, 보육, 돌봄, 모자보건,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육아휴직
결혼·출산을 위한 환경조성	청년(신혼부부), 여성, 사회전반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주거, 사회문화 전반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계층자료(예산기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구분 및 작성

1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발제자료 1

토론 1. “구조적 접근 모색과 효과적인 정책 발굴 병행” 제안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책 발굴이 중요
 -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저출산 사업 리스트에서 배제할 필요
 - 연관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 필요
- 현금성 정책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정책을 고민할 필요성 강조
 - 각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주의가 필요
 - 국가재정 지원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
 - 외국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토론 2. “여성과 남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강조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정책 경계를 구획하는 작업보다 발신하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
 - 가족, 노인, 청년, 사회보장정책을 아우르는 기본계획의 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구획하는 작업은 쉽지 않음
 - 같은 지출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메시지를 다듬는 데에 집중할 필요
- 일과 양육 양립 및 이를 통한 경제적 안정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 필요
 - 필수 지원인 가족 정책 예산 확대 필요
 - 시간, 서비스, 수당의 세 측면에서 부부 돌봄 시간 보장,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수당 보편 지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토론 3.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 소개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토론회에서 강조된 방향과 정부의 지향이 상당 부분 일치
 -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조 하에 정책의 방향과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설정하자는 토론회의 문제의식에 동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3.28.)에서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래 5차 계획 준비를 위한 정책 검토 작업을 하반기까지 할 계획



토론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보완 방안 검토” 발표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관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고민
 - 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제언을 숙제로 생각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나 생산성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 근로 체제 도입, 주거 지원 정책 내실화 방안 등 검토



토론 5.

“청년 의식 변화를 감안한 적극적인 일-생활 양립 정책 도입” 강조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 기자)

- 남녀 보편의 일-생활 양립을 지향하는 청년에 부응하는 과감한 정책 필요
 - 일과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청년의 의식이 크게 달라졌음
 -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제공자 차별 금지와 같이 일과 생활 양립의 양대 축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 필요

04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교육개혁**



II-4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교육개혁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2023. 5. 9. 화 | 09:30~11:4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개회식	9:30~10:00	
1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
	축사	유기홍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발제 및 토론	10:00~11:40	좌장 이규연 미래학회장 / JTBC 고문
2	발제 1	[AI 시대의 교육개혁]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 고려대학교 前 총장
	발제 2	[AI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 방안]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토론	김형신	오디세이학교 미래교육부장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오상훈	릭스로보 창업자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주최
대한민국국회
NATIONAL ASSEMBLY

주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 RESEARCH

개요

- 주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 추진 배경
 - 인공지능은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영 분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가의 영역, 고난도의 첨단 산업과 국방 및 우주 기술까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음
 - 국회는 인공지능책임법안(2023년),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2022년, 2021년), 인공지능산업육성(2020년) 등을 발의했으나, 인공지능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 일시: 2023. 5. 9(화) 09:30~11:4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ChatGPT 현상은 세계적 신드롬, 우리는 격변의 문턱에 있으며 이 시대에 인재육성이 핵심이며 창의성과 다양성 향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교육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



주요 논의사항

발제 · 01

“문제해결력 중심의 배움으로 전환” 강조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고려대학교 前 총장)

- 미국 대학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 전세계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 상황에서 한국 대학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
 -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디자인 사고를 통한 성취 습관을 교육, 호주는 교육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체험중심 교육도 필요한데, Udacity 대학은 취업이 안되면 학생들에게 등록금 돌려줌, 대학은 놀이동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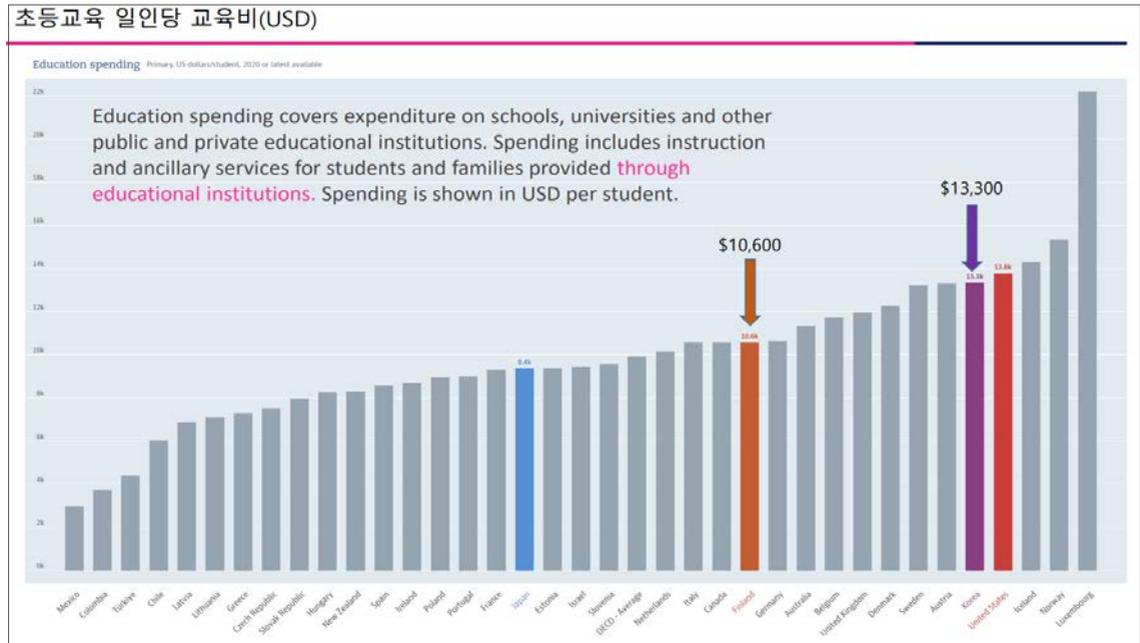
발제 · 02

“국가 주도의 AI 기반 개인맞춤형 시스템 개발” 필요

김종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학교법인 이산학원) 이사장)

-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고 기초학력 미달도 많아져, 지역 간 학력 격차 및 학교 내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2022년 한국의 사교육비 26조원, 월평균 사교육비 41만원 돌파(그림1), 전체 학생의 76%가 사교육에 참여
 -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최하위 수준, OECD 평균의 70% 수준(그림2)
 - 기초학력미달 10년 사이 6배 증가,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는 OECD 1위
- 게다가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중고교는 정보교육 수준이 주요국 대비 꼴찌, 대안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교육 필요

- 인공지능 시대에 초중고 정보교과 시수, 교원 증가와 대학의 정보 컴퓨터 입학 증원, 수준 높은 IT 실력과 학업을 겸비한 자기주도적 창업 인재 양성 필요



| 김종현 이사장 발제자료 |



토론 1. “미래교육과 시민교육의 콜라보” 제안

김형신 (오디세이학교 미래교육부장)

- 초중등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 중심은 어려워,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이 논의, 수용, 반영되는 경험이 거의 없어 내적으로 교육 동기를 발휘하지 못함
 - 현재 학생들은 자율성을 발휘하는 시민성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
- 미래 교육 방향이 지나치게 역량 중심으로 전개될 때 학생들의 생각과 시야가 미래사회에 생존의 문제만 집착할 우려
 -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자율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함
 -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하고 자기주도성, 창의성 같은 미래교육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음



토론 2. “지금 필요한 건 HUMART” 강조

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 인공지능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연결지능, 인성역량, 실천지식, 소통능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교사의 일방적 수업 대신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 이미 단순 지식 전달과 기본 개념 이해는 AI 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음
 - AI를 중심으로 펼쳐질 미래사회는 기술 결정이 아니라 윤리 결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 기술은 이미 충분하고 앞으로도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기에 AI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잘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함
- AI와 대비되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가장 고차원적 영역의 향상
 - 인간의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인간이 인간다움(humanity)이 있었기 때문, 새로운 인성역량(humanity+smart), HUMART가 필요

토론 3. “AI 교수-학습 지원” 필요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

- 인공지능 때문에 교육개혁이 필요한지, 인공지능으로 교육개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으로 개별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습보충을 넘어서기 힘들며 인간고유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감성적 창조자,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주도적 태도, 타인의 이해 능력을 육성해야 함
 -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활용 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학습은 디지털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에서의 ‘학습보충’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
 - 교사의 역할은 앞으로 ‘집어 넣어주는’ 역할에서, 섬세한 ‘학습촉진자’의 역할로 변하고, 학교는 소외 없는 교육 복지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
- 국회와 정부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신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최대한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학습하게 해야 함

토론 4. “스마트 교실사업” 강조

오상훈 (릭스로보 창업자)

- 스마트 교실사업은 교실 자체를 플랫폼 및 로봇화하여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를 들어 아이패드, 크롬 북, 디지털 칠판, 모디(MODY) 등을 통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육과 관리
- 제조기반의 F/W 엔지니어, 제조기반의 S/W 엔지니어 필요
 -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듈 기반의 S/W교육 의무화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다음으로는 이들이 반도체 플랫폼 기업을 창업하여 커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과정 필요
- 영국이 소프트웨어 교육 수준은 최고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기업이 정신을 가르쳐야 하고, 반도체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기업이 정신을 갖춘 학생들이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음



토론 5.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디지털 인재 양성” 필요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교육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교육 비전을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도 발표
 - 디지털 교육의 비전인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교사)과 기술(에듀테크)에 집중
 - 2025년 수학·영어·정보 세 개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교사의 역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기술적 전문성도 함께 갖춘 혁신적 교사들을 양성
 - 민간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쉽게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생태계도 조성
 - 아이들의 학습을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가르치는 게 핵심,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함
- 지식중심의 교육을 넘어 상담 코칭 교육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필요

05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II-5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5회 |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3. 7. 13(목) 09:30~11: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1부		2부	
개회식	9:30~10:00	발제 및 토론	10:00~11:30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 이 에 재 아나운서</p> <p>개회 및 국민의례</p> <p>개회사 김 진 표 국회의장</p> <p>축사 하 태 경 국회의외교통일위원회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p> <p>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p>박 진 외교부 장관</p>		<p>기조연설</p> <p>【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 】</p> <p>반 기 문 보더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 제8대 유엔 사무총장</p> <p>좌장 전 재 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p> <p>토론 김 한 정 국회헌반도평화포럼 대표위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p>최 형 두 글로벌혁신연구모범 연구책임위원 / 국민의힘 국회의원</p> <p>서 정 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p> <p>이 희 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성균중국연구소장</p> <p>최 원 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p> <p>이 정 은 동아일보 논설위원</p>	

주 최



대한민국국회
NATIONAL ASSEMBLY

주 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회미래연구원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ASSEMBLY STUDIES

개요

- 주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추진 배경
 -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지정학적 위기의 부상 속에서 탈냉전 질서의 종언, 세계질서의 대전환 시대 도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쇠락과 진영화 질서의 부상 속에서 세계는 '기술-경제-안보-가치' 등이 상호연계되는 복합위기에 직면
 -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이 급격히 제고되는 대전환 시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긴밀히 연계되고, 경제와 안보, 기술과 외교가 밀접히 연계되는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초당적 토론과 역할이 필요한 시기
- 일시: 2023. 7. 13(목) 09:30~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탈냉전 질서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 불안정, 세계 각국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에 분주”한 상황이라고 강조
- 이와 같은 “국제질서 재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능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때”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해야하고, 국회의 역할 막중.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



주요 논의사항

기조연설

“세계질서 재편기, 국회의 역할” 발표

반기문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제8대 유엔 사무총장)

- 최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 미중간의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국제정치와 경제정세에 커다란 영향
 -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
- 미국과 중국의 대립 심화되나, 진영간의 대립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 현재 미중간의 대립이 우리가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봄
- 한국이 가치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타
 - 한미일 3국 협력관계 구축하면서, 중국도 적대시하지 않아야 함
 - 중국에 대한 수입의 안정화, 다양화는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아님
- 세계질서 재편기 주요한 과제 해결에 국회의 역할 매우 중요
 - 외교는 행정부의 독점적 영역이지만 국익 차원에서 국회의 역할도 필요
 -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회내의 활발한 토의와 정책 대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초당적 태도로서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
 - 국회의 대외활동이 바람직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공공외교 분야
 -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초격차, 인재 양성 등에도 국회 역할 중요

토론 1. “국회 미래전략특위 상설화” 제안

김한정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늘날 세계질서의 기본동력은 미중간의 전략갈등이며, 21세기 세계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시대로, 국제사회가 공유해나가는 공유의 솔루션을 내야 함
- 민주주의, 경제발전, 안보도 지켜낸 3관왕의 자긍심을 잊어서는 안되나, 불확실한 미래에 보장받을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
-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초당파적이어야 하고, 그 속성상 중장기적이어야 하므로, 국회가 중요한 장이 됨
- 국회가 초당적 국가전략 논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구조 개편 필요하고, 행정부 견제에 치우친 칸막이 분절된 상임위 체제를 통합적이고 총합적인 미래전략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전략특위 상설화를 제안

토론 2. “국회가 초당파적 외교적 지혜 늘리는 노력” 필요

최형두 (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

-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커뮤니티가 복원되고, 초당파적 외교적 지혜를 늘릴 수 있는 국회의 노력 필요
 - 국회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국내정치는 정당이 책임지면 되나, 외교안보가 잘못 되면 국가의 존망이 좌우
-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인식은 80년대에 머물러 있고 외교안보에 대한 시대의 추이를 따라가는 능력도 결핍된 상황에서 집단지성이 매우 요구됨
- MIKTA 국회의장 회의 등 외교노력을 복원하는 등 외교지평을 확대할 필요
 - 국회는 지속가능한 외교의 채널이 되어, 정부는 바뀌나 국회는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할 수 있음
 - 의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뒷받침하는 기구와 함께, 외교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 필요



토론 3. “일하는 국회보다 일하는 의원개인이 중요” 강조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원개개인들이 특정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고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의원 만들어야 함
-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
 -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공론장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함
 - 국회 밖에서 국회의 역할을 물어야.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중요
- 의회외교가 아니라 의회교류로 이름 붙여야 할 필요
 - 교류를 통해 의원개인이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보파악과 선제적 대응,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의원교류, 의회교류로 생각하는 것을 제안



토론 4. “국회만의 브랜드 외교” 필요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

- 글로벌질서 진영화 보호주의화 당분간 지속될 것
 - 미중간 갈등이 신냉전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적으로 소비할 국가가 없으며, 가치와 이념의 경쟁국면은 아님
 - 군사블록의 문제도 중국과 블록화하고자 하는 국가도 많지 않고, 중국은 비동맹국이며, 경제적 상호 의존이 무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중간 디커플링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
- 신냉전 프레임에 닫히면 외교정책 공간이 좁아짐
 - 프레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의 핵심은 차이를 다루는 예술이며, 차이를 다룰 줄 아는 지혜 필요
 - 한중관계 모멘텀을 찾아야 하고, AI 등 미래 분야를 다루는 것이 한중의원연맹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의제를 기획해야 할 필요
- 정부외교를 해석하는 투쟁을 지양해야
 -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 국회만의 브랜드 외교 필요



토론 5.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 초당적 대중 컨세서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
 - 중국에 대한 적대적 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대중 외교에 대한 국내적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국회 역할의 중요한 과제
- 국력에 비해 외교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의 위상이 매우 낮음
 - 한국외교의 종합순위 7위, 다자적 차원에서의 역량 14위, 지역차원의 리더십 10위, 국제사회 주도 전략적 비전과 지도력 11위로 나타남
 -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법이나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어긋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함
 - 미중 사이에 끼인 국가, 눈치보는 외교를 극복해야 할 필요



토론 6.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초당적 협력” 필요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

- 외교안보에 경제이슈가 연계되는 국가대항전 양상
 - 세계가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혜택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관심 필요
 -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일본의 반도체 지원 의원연맹 등을 참고해야 할 필요
-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초당적 협력 필요
 - 신흥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국익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 치열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대한 국회의 관심 필요
 - 기존의 북한, 한미, 한일 등 양자외교를 떠나서 미래지향적 주제를 중심으로 의회의 역할이 필요
 - 글로벌 경쟁 분야에 대해 입법으로 선제적 광범위한 지원 필요. 미국의 경우 오픈AI 대표, 구글CEO 등이 의회에 출석해 국회에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 깊음

06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II-6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2023. 7. 19. (수) 9:30~11: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1부		2부	
개회식	9:30 - 10:00	발제 및 토론	10:00 - 11:30
개회 및 국민의례		좌장	조 준 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개회사	김 진 표 국회의장	발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과제
축사	이 재 정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 항 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 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토론	김 병 옥 국회유니콘팜 /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일 영 국회신성장산업포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용 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이 형 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성 상 업 벤처기업협회 회장
			류 경 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임 경 업 조선일보 기자

주 최 대한민국국회
NATIONAL ASSEMBLY

주 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외미래연구원
KOREA VEN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개요

- 주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 입법과 정책과제
- 추진 배경
 - 글로벌 긴축, 3高(금리, 환율, 물가)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약화될 우려 존재
 - 미래 산업구조 재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 필요
- 일시: 2023. 7. 19(수) 09:30~11: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회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법률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규제 완화와 행정조치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 현안이라고 강조
- 또한,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회와 소속기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입법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벤처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



주요 논의사항

발제 · 01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5대 입법·정책과제” 제안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시화 필요
 - 1997년 「벤처특별법」 제정 후, 3차 일몰 시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시법으로 전환할 필요
 - 벤처·스타트업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체계적 지원을 이뤄내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 및 제도화가 필요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이원화된 벤처캐피탈 규제 해소 필요
 -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대 축인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혼란과 비효율성이 발생
 - 양 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일 업권 간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제정에 대한 신중 검토 제안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자국 플랫폼의 보호를 위해 규제 입법을 추진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
-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규제 개선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고,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발전 토대를 마련할 필요
-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펀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해, 해외 VC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선진 벤처투자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필요

2. 벤처캐피탈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 국내 벤처캐피탈의 양대 축인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가 다른 규제를 적용 받음에 따른 혼란과 차별이 발생함. 이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벤처캐피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업권 간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함

[현황 및 개선필요사항]		[정책제언]	
<p>2022 벤처캐피탈 투자실적</p> <p>기타 8%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회사 50% 신기술투자 조합, 회사 42%</p>	관련근거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기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금융원)
	도입시기	1986.5	1986.12
	진입규제	최소자본금 20억원 등록기간 14일	최소자본금 100억원 등록기간 6개월
	의무투자	3년 이내 총자산의 40%를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의무 투자	없음
	투자금지 업종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금융 및 보험업 (관련 서비스업 제외) 부동산업 (관련 서비스업 제외) 신기술 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p>*금융업으로서 지켜야 할 규제가 많다* *P2P, 크라우드 펀딩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IT를 활용하는 금융 보험업에 대한 투자 허용 필요하다*</p>	<p>스타트업 입장에서 누구에게 투자 받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이 다름. 예) 신기술에게는 고객확인서 제출, 일정 주기마다 고객확인 의무 재수령에 협조해야</p>	
		<p>정책제언1. 벤처캐피탈 본연의 의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캐피탈과 관련없는 금융기관으로 갖는 신기사의 의무 면제 예)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제외, 전자금융거래 없는 신기사의 여신법상 정보기술부문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등(여신법 제50조의13 제4항 신설 및 제54조의 4 제4항 신설) 투자금지 업종 완화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의 투자 범위 확대 예) 핀테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신법 제2조제14의2호가목 개정 양 투자기관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나 보완할 규제(예: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는 없는지 실패 업권간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할 필요 	
		<p>정책제언2. 궁극적으로는 동일 업무/기능 수행 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를 단순화해 투자기관이나 스타트업에 불필요한 혼란 제거하는 것 필요 - 소관 법률 일원화하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 면제하는 등의 차별화 방식 도입 필요 예) 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투자제도를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여 운영 일원화 - 정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조합의 경우 각종 제한 완화해 자유로운 투자활동 보장할 필요 	

| 최향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발제자로 |

토론 1. “지역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 활성화” 제안

김병욱 (국회유니콘팜/국민의힘 국회의원)

- 지역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마련 필요
 - 지역 기업, 대학,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 기반 빅테크 스타트업 성공모델이 다수 창출될 필요가 있음
- 세종으로의 국회 이전 이후, 국회를 스타트업 입주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역할 하도록 지원할 필요

토론 2. “벤처·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과 새로운 혁신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정일영 (국회신성장산업포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혁신 지원 필요
 -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내 민간자금의 유인을 확대할 필요
 -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CVC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 출자 비중 확대하는 방안 등 검토함으로써,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기제로 활용 필요
-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법령 정비
 - 현장의 정책수요 반영한 데이터 활용과 공유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



토론 3. “지역 클러스터 기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제안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 지역 기반 혁신 클러스터 마련과 클러스터 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충 필요성 강조
 - 인력양성과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바탕이 될 때, 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
 - 자생적 벤처생태계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외 인재 유치와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글로벌화에 맞춘 제도 정비를 이뤄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



토론 4.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회수 지원” 제안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과 규제혁신 필요성 강조
 -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금융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전환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히, 민간자본의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생태계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회수 지원, 정책금융 통한 운전자금 공급 및 펀드 조성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
 -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자본시장 형성 필요



토론 5. “벤처투자 시장 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개선 필요
 -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아, 벤처기업은 투자사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이 달라 각기 다른 대응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이 발생
 - 더불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투자제약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
 - 특히, CVC는 단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 외 신사업 분야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계열사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등 신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벤처투자 시장 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새로운 혁신방안 필요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책금융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는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대규모 자금 투자를 통해 스케일업 지원을 가능토록 할 것



토론 6. “민간 주도 자율규제 기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마련” 제안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신-구 산업 간 갈등 해결 필요
- 온라인 플랫폼 부문 ‘자율규제’ 기반 제도 도입과 추진 필요
- 얼어붙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자금 공급하는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필요
- 침체된 투자심리 되살리기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자 길잡이인 모태펀드 예산 확대 필요
- 스타트업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보상 제도 도입 및 활성화 필요



토론 7. “규제샌드박스 성과 기반 법령 개정과 규제혁신” 제안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

-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므로,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
 - 혁신바우처, 펀드조성, 컨설팅 등 규제샌드박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비교적 잘 구성이 되어 있음
 - 문제는 규제샌드박스가 ‘실제 규제를 해소했는가’이며, 국회 혹은 주무 부처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규제와 법을 바꾼 사례를 보기 힘들
 - 가장 핵심인 법령 개정을 안 하면 이 모든 시도들이 변죽 때리기에 불과할 수 있음

대토론회 이후 주요 논의경과

국회의 논의 경과

- ▶ 국회는 5월 10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와 관련해 국회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 차원 입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그리고, 7월 19일 개최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 주제의 국가현안 대토론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벤처·스타트업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와 행정조치 사항 등을 포괄하는 총 25건의 후속 해결책 마련을 이뤄냄
- ▶ 더불어, 국회 내 소속기관들은 혁신성장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구체화된 형태로 제안하고자 함

정부의 추진 경과

- ▶ 정부는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1) 글로벌 진출, 2) 디지털 전환, 3) 함께 도약을 포함한 3대 성장전략을 발표함
- ▶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소벤처 성장모델로 삼고,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 지난 8월 30일에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함
: 해당 계획에는 1)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2)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 및 새로운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4)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등 주요 전략을 포함함

쟁점과 향후 과제

- ▶ 향후 획기적인 벤처 육성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창업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하여, 주요 핵심 정책 및 입법과제 마련에 속도감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국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주요 제안사항들을 참고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고, 탐색된 주요 입법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와 행정조치 사항 등에 있어 우선순위를 탐색함으로써,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음

07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



II-7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소멸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2023. 8. 30. (수) 9:00~11: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1부 개최식 09:00 - 9:30	2부 발제 및 토론 9:30 - 11:00
<p>개회 및 국민의례</p> <hr/> <p>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장</p> <hr/> <p>축사 김고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p>	<p>기조연설</p> <p>[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p> <hr/> <p>좌장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p> <hr/> <p>토론</p> <p>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 경상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p> <p>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 신안군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p>

주최

대한민국국회
NATIONAL ASSEMBLY

주관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POLICY RESEARCH INSTITUTE

개요

- 주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 추진 배경
 - 저출생·고령화, 청년세대 유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는 지방의 청년층 유출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반복
 - 그간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저출생 및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일시: 2023. 8. 30(수) 9:00~11: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개회사 주요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으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하며 특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이를 위해 “지역대학 졸업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제시



주요 논의사항

기조연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제안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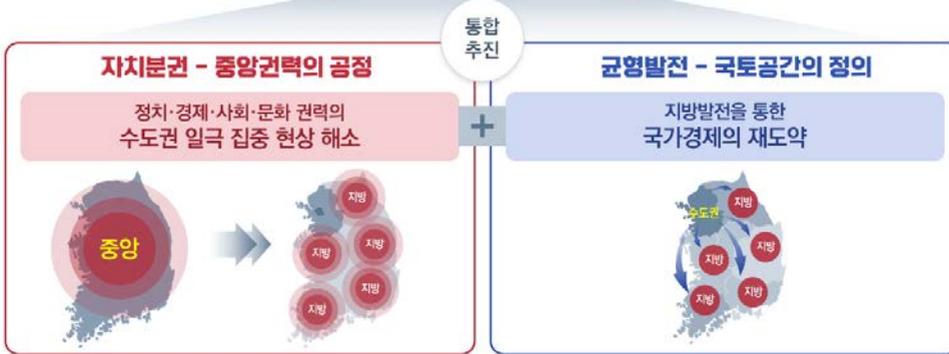
-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한 지방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제시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표 추이 분석을 통해 인구, 소득(GRDP), 일자리(취업자)의 불균형, 격차 및 비수도권 지방소멸 위기감 증대 확인
 - 보육, 돌봄부터 대학까지 지방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지방대학 살리기 등 강조
- 지난 균형발전정책의 성찰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및 개선점 도출
 -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자산의 공간적 격차,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등 구조적 한계 노정
 -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 등의 정책적 한계 인식
 -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 필요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의 역할 강조
 -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1)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2)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촉진, 3)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4)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5)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 등 제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 부여 필요
 - 교육자유특구 등 제도적, 법적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조

지방시대

비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자율·공정·연대·희망의 4대 가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발제자료 |

토론 1. “지방에 권한 줘야 능력도 생길 것임”을 강조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조적 존재가 아닌 독립적 위상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핵심 주체임
 -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필요
 - 지방정부 각자 사정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보 필요
- 지방소멸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적 해결 방안 제안
 - 법 규제의 최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필요
 -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료주의 타파 선행되어야 함
 -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역예산제 전면 도입,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적 해결 요청

토론 2. “지방정부로의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 시급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은 중앙의 권한과 예산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고, 모든 것을 지방정부에 넘긴다는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 제안
 -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시 국가계획의 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적 권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부처 설치, 공공기관 이전 등 제안
 - 지방을 대변하고 역할을 대신하는 강력한 중앙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제안
 -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기업 본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며 가령, 농협, 수협을 본사를 전남에 이전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음

토론 3. “균형발전을 위해 자립적 지역발전기반 기반 구축” 필요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정하여 역할 재정립 필요
- 행정부와 입법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세종 이전의 필요성 재확인
-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대학 살리기 전략 뿐 아니라 어린이집, 초·중·고 등 교육시설의 정의로운 구조 전환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 필요

토론 4.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 강조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회장/신안군수)

-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함
 - 법 제정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시·도, 시·군·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필요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함



토론 5. “도시권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 필요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권 전략, 중소도시와 농촌 전략 등 두 트랙(two-track) 전략 필요
 -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수도권 집적의 불경제를 고민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중앙정부 부처 설치 필요
 - 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일자리 및 정주 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생태계와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정주환경 구축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소도시와 농어촌의 활성화 전략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육성,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전략 등 제시



토론 6.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소득세 감면과 지방소멸을 막을 1.5 주민제 방식” 제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지역의 기업 유치에 위한 특단의 방법으로 기업종사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안
 - 기업의 지방이전은 법인세보다 기업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청년 인재 유치 방안과 주중에는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지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말 주민등록 제도 제안
 - 지역의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해 성적 우수 학생이 관내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정착 장학금 등 경제적 혜택 부여 방안 제시
 - 지역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에 다른 지역의 주민으로 살 수 있는 1.5주민등록제 방안 검토 필요

[부록]

전문기자 간담회



목적 및 의의

-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에 앞서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및 여론을 청취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및 대국민 관심과 공감대 환기
- 기자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를 토론회의 세부 주제로 반영하고, 참석 전문가를 토론자로 섭외하는 등 국가현안 대토론회와 연계

개요

- 주 제 : 국가현안 대토론회의 각 회차별 논의주제를 대상으로 함
- 참석자 :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해당 분야 전문가·논설위원,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 진행 방식 : 국회사무총장 모두말씀(간담회 취지, 대토론회 현안 등 설명) 이후 자유로운 의견청취 및 상호 질의·응답으로 진행, 차담 또는 오찬을 겸함
- 행사 기획 :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실,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실, 국회미래연구원

개최 현황

회차	간담회 일시·장소	주제	관련 토론회	
1	2.15.(수) 10:30~11:30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연금개혁	3.21.(화)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전망과 대안
2	3. 2.(목) 10:30~11:40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기후위기	4.11.(화)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3	3.29.(수) 10:30~11:40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인구위기	4.25.(화)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4	4.18.(화) 12:00~13:10 국회 본청 3식당 별실	교육개혁	5. 9.(화)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5	6.16.(금) 11:30~13:00 국회 본청 3식당 별실	세계질서	7.13.(목)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6.21.(수) 11:30~13:00 국회 본청 3식당 별실	벤처·스타트업	7.19.(수)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7	8. 8.(화) 11:30~13:30 달개비	지방소멸	8.30.(수)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

회차별 결과보고

1.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연금개혁) 기자 간담회

■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2. 15.(수) 10:30~11:30/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8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배경과 취지 등을 전문가들과 공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자들의 의견 청취
- **(토론회 방향성)** 연금개혁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 만큼 국회가 보다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금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계기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국민들이 모수개혁에 관심이 많으므로, 금번 토론회에서 모수개혁이 충분히 다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 토론회에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도모하여 연금개혁에 국회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공동연구 관련)** 현재 논의 중인 개혁안들이 향후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등에 관하여 공동연구 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연금개혁 추진 시, 재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보장 측면에서의 효과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기후위기) 기자 간담회

■ 간담회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3. 2.(목) 10:30~11:40/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 7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국가현안 대토론회 추진 배경과 취지 등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
- **(토론회 방향성)** 기상청 기상데이터 구축 현황 및 대국민 데이터 공개와 지원 방안, 토론회 발제 방향성 등을 공유
 - 감축과 적응정책의 조화 방안과 더불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농업, 에너지, 건강, 재난 대응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기후변화 관련 평균값 추이뿐 아니라 기상 변동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분석과 대비 필요
- **(기후데이터와 구체적 대응)** 기후데이터 분석 통한 분야별 영향과 위험평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적응 대책 마련과 국민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필요성 등을 제안
 - 기후변화 특이점이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기반의 근거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해줄 방안을 논의할 필요
 - 국민들의 행동과 참여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데이터 기반 정보를 제공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필요
 - 국내에 부족한 위성데이터 및 해양변화 관련 데이터 확보 방안도 고민할 필요
 - 뉴욕시, 독일 등을 참고하여 기상청의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피해 영향,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분야별 필요한 적응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이 무역장벽화 되고 있어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 실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자발적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3.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인구위기) 기자 간담회

■ 간담회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3. 29.(목) 10:30~11:40/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인구위기 관련 전문가 6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인구위기를 주제로 한 국가현안 대토론회 추진 배경과 취지 등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자들의 의견을 청취
- **(토론회 취지)** 지난 20년간 진행해온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평가해 보고 효과성 분석을 통해 제도 재점검
 - 현재까지 저출산 관련 200여개 정책에 280조를 썼다고 하는데, 이들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근거 마련
 - 한편으로는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국가의 경험을 분석해 시사점을 모색
- **(정부 정책 방향)**
 - 최근의 정책 발표 내용 또한 기존 버전을 약간 수정한 정도로 보이고, 현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을 판단하기 어려움
 - 거버넌스, 리더십의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을 단순 수합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효과적
 - 문제의 근원에 대한 성찰이 부재함. 다문화가족 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대상/현상에 대한 관심 부족
- **(정책 효과성)**
 -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대상이 과도하게 축소. 육아휴직의 경우 수당의 상한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예외조항으로 인한 실질적 대상 축소. 수도권에 맞벌이 부부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대상으로 할 필요
 - 인센티브와 함께 정책 시행을 위한 강제력 확보하여야 함



4.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교육개혁) 기자 간담회

■ 간담회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4. 18.(화) 12:00~13:10/국회 본청 3식당 별실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교육개혁 관련 전문가 6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국회에서 교육개혁 관련 토론회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배경과 취지 등을 전문가들과 공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자들의 의견 청취

○ **(토론회 방향성)**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술 패러다임 확산 속,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금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계기로 미래 인재상에 대한 구체적 정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교육은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므로, 학교현장 내 기술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를 넘어, 입시제도, 지역 간 격차, 정보 공유, 교사 양성, 민-관 파트너십 등 포괄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 **(공동연구 관련)** 향후 국민들이 AI 시대 교육개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미래 교실 구축,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에 관하여 공동연구 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해외 주요국의 다양한 교육개혁 동향과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한 AI 시대 부합하는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5.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세계질서) 기자 간담회

■ 간담회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6. 16.(금) 11:30~13:00/국회 본청 3식당 별실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세계질서 관련 논설위원 4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국제부장 출신의 논설위원, 연구소장을 초청, 세계질서 대전환기 한국 외교의 방향, 국회의 역할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 청취
- **(국제질서변화와 의회의 역할)** 대외정세 변화 속에서 국회가 외교를 여야 정쟁의 소재가 아닌 초당적 토론과 교류의 어젠더로 접근할 필요
 - 핵심 외교이슈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주는 역할을 할 필요
 - 미국의회의 청문회와 정책토론회는 국가어젠다와 외교중점을 보여주고, 중국공산당 집체학습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핵심어젠다 부각
-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적극 외교, 의회의 초당적 접근)**
 - 한국은 국제뉴스에 대한 소비도가 낮고, 질서변화에 대한 관심도 낮음. 국회차원의 국제정세 분석과 세계질서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안 검토
 - 외교가 정쟁이 되지 않도록 해외순방 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등 초당적 접근 필요
 - 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 등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국의 변화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교류 지속성 제고, 불공정 거래 등 요구할 것은 하면서, 대중 요구에 대해 독일 등 다른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공간 모색도 필요
- **(경제안보, 기술규범 등 글로벌 어젠더와 국회의 역할)**
 - 경제가 세계질서 변화의 핵심으로, 경제안보 문제를 정책연구소뿐만 아니라 국회가 주요한 이슈로 다룰 필요
 - AI 규제 등 기술분야가 외교에 있어 점점 중요해짐.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관여하고 주도하는 외교 필요

○ (한국 외교위상 제고와 의회외교)

- 한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는 지금이 한국 외교지형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임. 안보리의 이슈가 70여개에 이르는 만큼 북한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국제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필요
- 인권문제 등 국회에서 다자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다자주의적 접근 필요
- 미중 양국에만 치우친 외교가 아닌, 유럽 등 지구 전체를 다루는 외교 필요
- 세계변화의 속도가 따라잡고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상황에서 지구 전체의 외교를 위한 협업체계 중요
 - *미국의회에 한국계 의원이 4명인 것은 한미의회 협력 제고 등에 기여
 - *위안부 결의안 채택 기여한 故 레인 에번스 의원 추모, 한미의원연맹 추진 시 논의



6.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벤처·스타트업) 기자 간담회

■ 간담회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6. 21.(수) 11:30~13:00/국회 본청 3식당 별실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경제·산업·스타트업 관련 전문가 6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등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국회에서 벤처·스타트업 관련 토론회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배경과 취지 등을 전문가들과 공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자들의 의견 청취
- **(토론회 방향성)**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성과와 한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 도전과제, 정부정책 방향 및 입법과제, 토론회 발제 및 토론방향 제안
 - 글로벌 긴축, 3高(금리, 환율, 물가) 등 리스크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악화될 우려가 확대
 - 미래 산업구조 재편을 바탕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와 성장률 제고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환이 필요
 - 실질적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내 주요 도전과제 탐색)**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함
 -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와 해외 주요국 대비 신규 유니콘 기업 수 등은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주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 도전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지원 확대, 신기술을 태동시키는 규제 혁신,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상호협력적인 창업생태계 구축, 벤처·스타트업을 뒷받침하는 문화 형성 등 측면으로 다양한 정책 및 입법과제 마련이 필요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구체적 법령정비·제도개선 등 향후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과 국회 중심 의제 제시
 - 금번 국가현안 대토론회 주요 제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와 행정조치사항 등 후속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 공유
 - 기존 정책자금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며, 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제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
 - * 모태펀드와 M&A 펀드, 그리고 해외투자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입법사항으로 고려함으로써, '융자'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대적 금융혁신을 뒷받침할 필요
 -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여, 새로운 혁신과 시도를 촉진하고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
 - 경쟁력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가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들 방안을 모색할 필요



7.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주제: 지방소멸) 기자 간담회

■ 간담회 진행 경과

- (일시/장소) 2023. 8. 8.(화) 11:30~13:30/달개비
- (참석자) 국회사무총장,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 지방소멸·인구위기 관련 논설위원 4명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공동연구진 등 배석

■ 주요 논의사항

- 지방소멸을 주제로 한 국가현안 대토론회 추진배경과 취지 등을 논설위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논설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 **(토론회 방향성)** 지역소멸위기의 현실, 정부정책 방향 및 입법과제, 토론회 발제 및 토론 방향 제안
 - 그간 모든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으나 수도권 편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존립과 관련된 국가적 난제(難題)로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를 중심으로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극복전략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 **(지방현실에 대한 실증적 진단과 실효성 높은 전략 모색)** 지방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원인은 지역별로 다양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 확인 필요
 - 지방 청년의 지역유출과 수도권 전입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지역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 원인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예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지역 주력 제조업의 쇠퇴 등), 남성중심적 문화, 여성 일자리 부족, 청년의 실험적 시도를 제한하는 제도와 여건 등
 - 지방소멸은 회색코뿔소**와 같은 이슈로 쉽게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천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접근도 고려
 - **회색코뿔소(Gray Rhino): 지속적인 경고로 이미 위험요소를 알고는 있지만 이를 간과하다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슈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지자체장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 협력 방안, 지방공기업 설치 등 지방권한 강화 필요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분야별로 세심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예시: 청년임대주택, 고령화로 인한 빈집문제, 보건의료의 경우 노인의료, 소아과 등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

제안된 주요 정책 아이디어

- 지역혁신을 이끌 **지역인재 육성 및 인적역량 개발** (예시: 중앙부처 공무원이 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부, 문체부 등 부처별 공무원 지방 파견,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과의 협력을 통해 역량 강화)
- 지방의 모든 도에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부여하여 **고도의 자치권 보장,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례를 인정하되, 수도권은 다국적 R&D 중심으로 하는 혁신적 방안** 제안
- 박정희 정부(포항공대), 노무현 정부(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특징에 ‘디지털’을 더한 **대학도시 모델, 다양한 대학 유형**(예시: 외국인 인력양성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 전문대학**, 은퇴자 도시에 설치하는 **은퇴자들을 위한 휴양대학** 등) 제안 (참고: 국립대학회계법 개정안)
- 일자리,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패키지 전략, 스마트팜(일자리창출)과 시골학교를 활용한 주거단지 등이 공존하는 **복합형 지역사업 지원 강화 및 제도 활성화(복합용도개발 등)**
- 농촌 지역의 **고부가가치창출의 스마트팜, 조합형 농업** (참고: 네덜란드 사례) 등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활성화 필요
- 인프라 중심 하드웨어에 집중하기보다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추진 고려

- **(지방위기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가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주도함으로써 정책 지속성 확보, 정부책임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치권은 선거철에 지방위기를 활용할 뿐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국가존립과 관련한 핵심이슈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
 -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이나 지역구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 하므로(예시: 교육자유특구는 수도권 의원 중심의 법사위에서 반대) 상임위를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구성하는 방안 제안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서

발간일 : 2023년 10월

편 집 : 국회미래연구원

발행처 :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이 책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 국회사무처·국회미래연구원, 2023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서

